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
보 도 자 료			
 환경부			
	담당 부서	기획재정담당관실	박광석 과장 / 서영태 서기관
			02-2110-7912 / 6605
	2011. 12. 26.(월) 총 19매		

모두를 위한 환경, 국민에게 더 가까이

-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-

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

-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(프탈레이트 등 5종)기준 설정
-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 도입

② 新기후변화대응체제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에 선제 대응

- 그린카드 혜택 대폭 확대, 150만장 발급
-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(Bonus-Malus)
- 전기자동차 2,500대 보급,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 선도

③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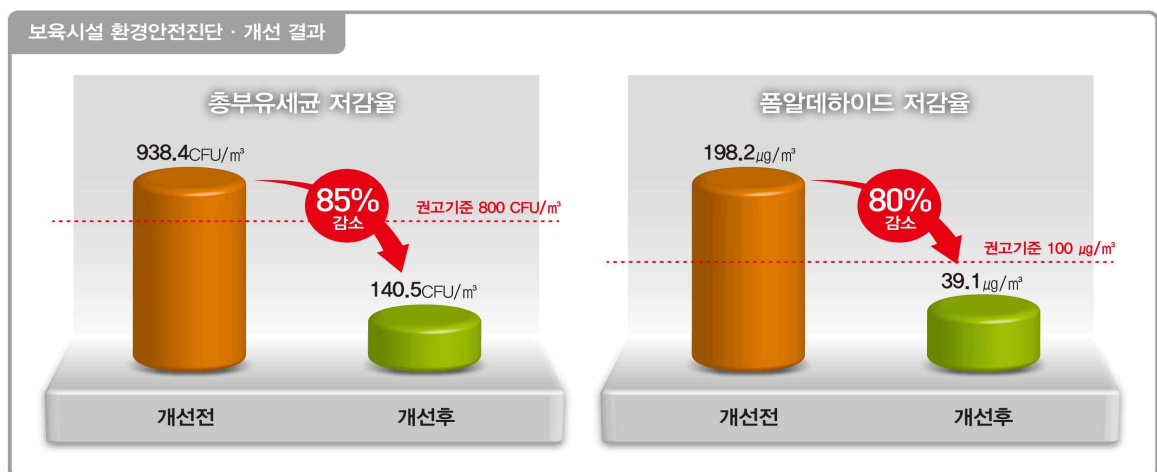
-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(藻類) 발생 예방 및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
- 생태계 변화 대응 및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
- 수변지역 개발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

① 환경부(장관 유영숙)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'2012년 업무보고'를 통해 밝힘

- 이를 위해 우선, 젖병,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,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·유통을 제한함

- 아울러, '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'16년까지 모든시설(보육원, 놀이터 등)에 적용할 예정임
- 이 경우 시설의 바닥재, 벽지,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진단해야 하며, 기준초과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
- 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 이전에는 신청에 따라 '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서비스' 를 제공할 계획임(1,000개소)

※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 환경안전개선 시범사업 결과 총 부유세균과 폼 알데하이드가 각각 85%, 80% 감소



- 그외, 아토피, 천식,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,
- 저소득 가정 등 2,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,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·개선해주는 '친환경건강도우미' 서비스도 제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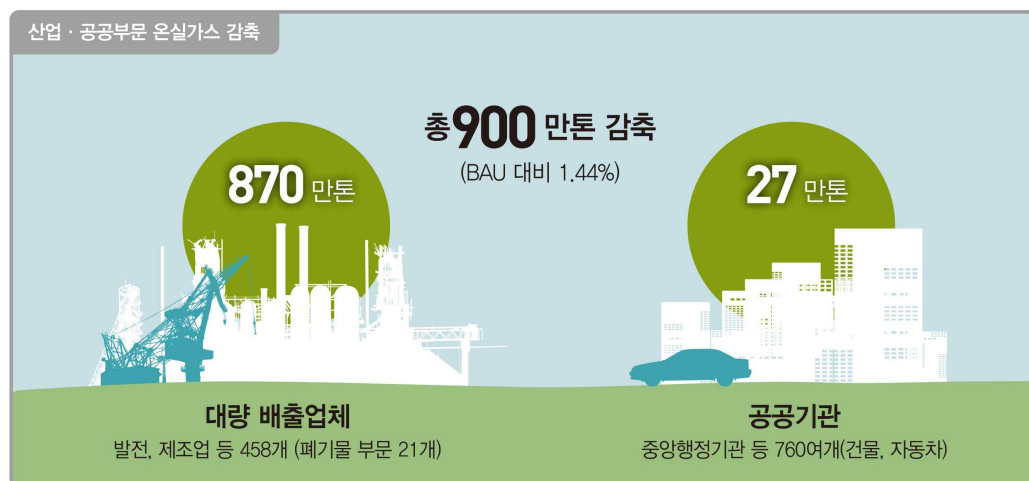
친환경 건강 도우미 점검 항목

구 분	점검대상 항목	비 고
기본항목	총휘발성유기화합물	아토피 피부염, 호흡기계 및 알레르기성 질환 등 환경성질환 유발물질
	미세먼지	
	폼알데하이드	
	곰팡이	
	집먼지 진드기	
	바닥먼지 내 유해물질	
선택항목	모발 내 유해원소	조직 내 영양상태 및 유해 중금속 노출정도 파악

- 한편, 환경부는 이와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·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는데,
 - 이를 위해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힘
 - 이 법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예정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·위해성을 평가하여, 위해물질로 밝혀진 경우 용도별 허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

②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, 그린카드 보급확대, 전기차 2,500대 보급 촉진

- ‘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’(COP 17)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·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‘新기후변화체제’ 설립 합의에 따라, 온실가스 다량배출국(7위)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
-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, 산업·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할 계획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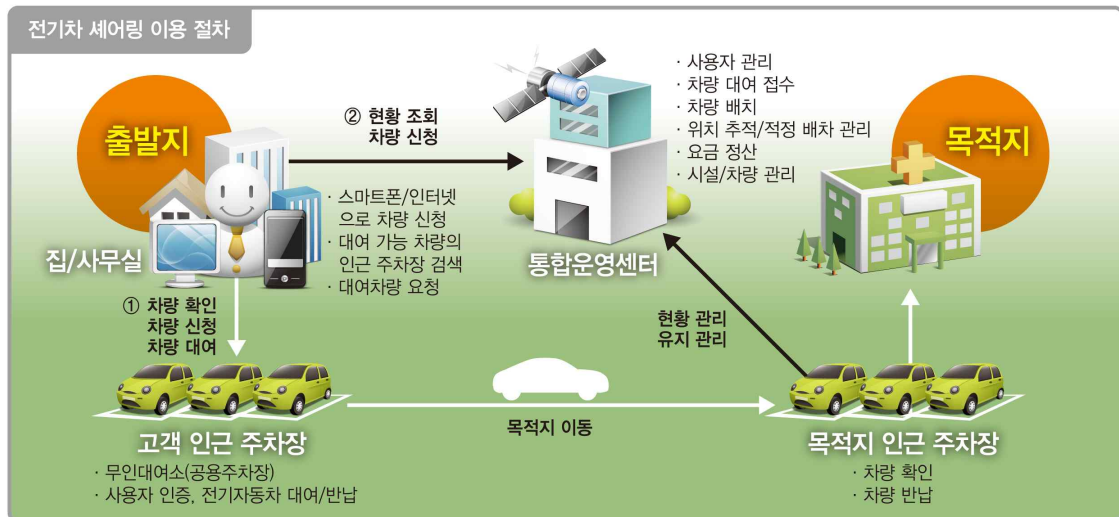
-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것임



- **탄소포인트** : 가정의 전기, 가스, 수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
- **녹색소비** : 개인이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의 1~5%를 포인트로 제공
- **공공부문 인센티브** : 지자체, 공공기관의 프로그램, 입장료 등 할인
- **일반카드 서비스** : 대중교통 이용 시 100~200원 적립 등 녹색생활 특화 포인트 제공

○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 차등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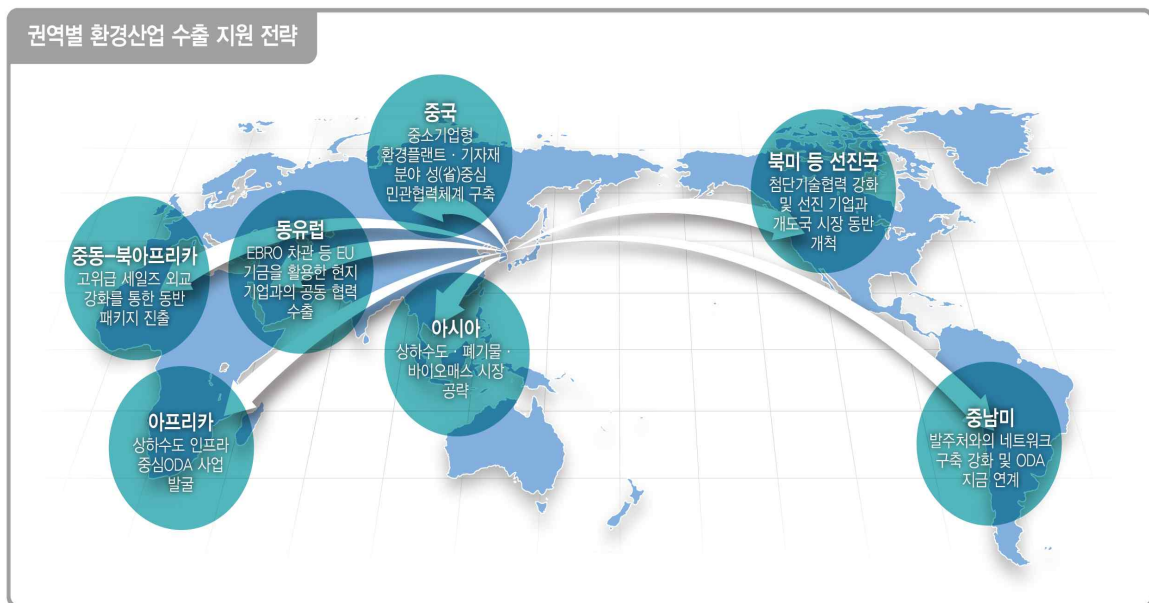
- 2012년 렌트카,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,500대를 보급,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,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힘



- 아울러, 우리나라의 중·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₂ 배출량이 작은차에는 보조금을 주고,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'Bonus-Malus'제도를 검토할 계획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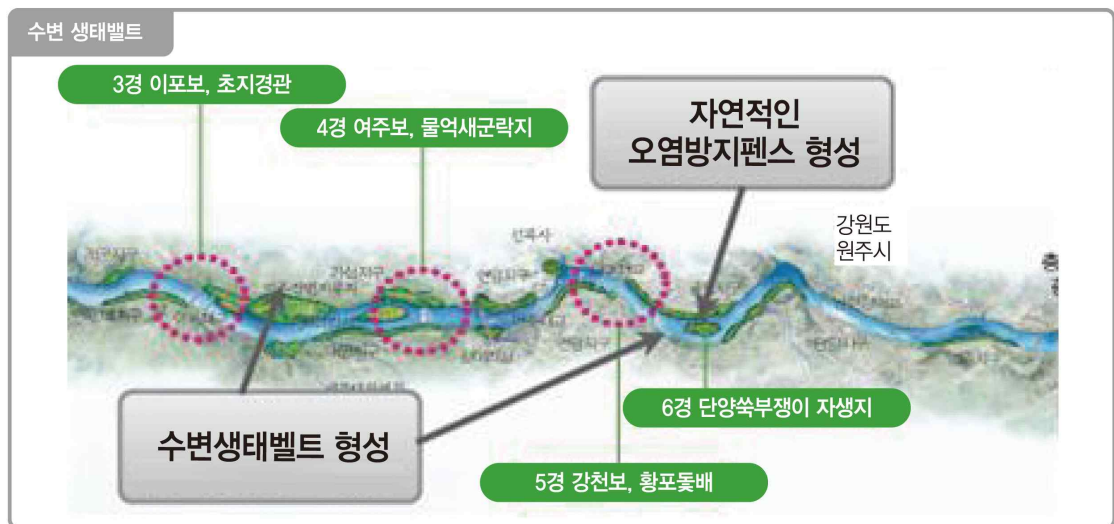
- 이와 함께,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만들겠다면서,
- 10년간 1조 5천억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고, 아시아, 중동, 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함



③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계획을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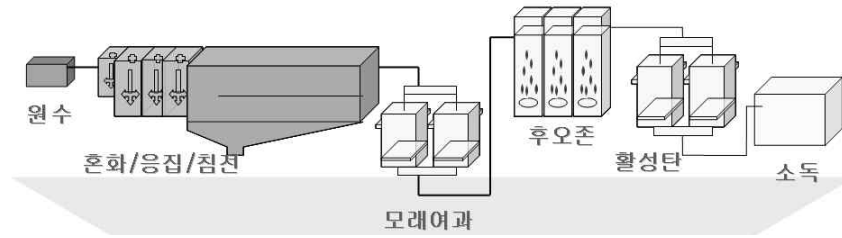
-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

-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,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, 손실을 보상함(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)
-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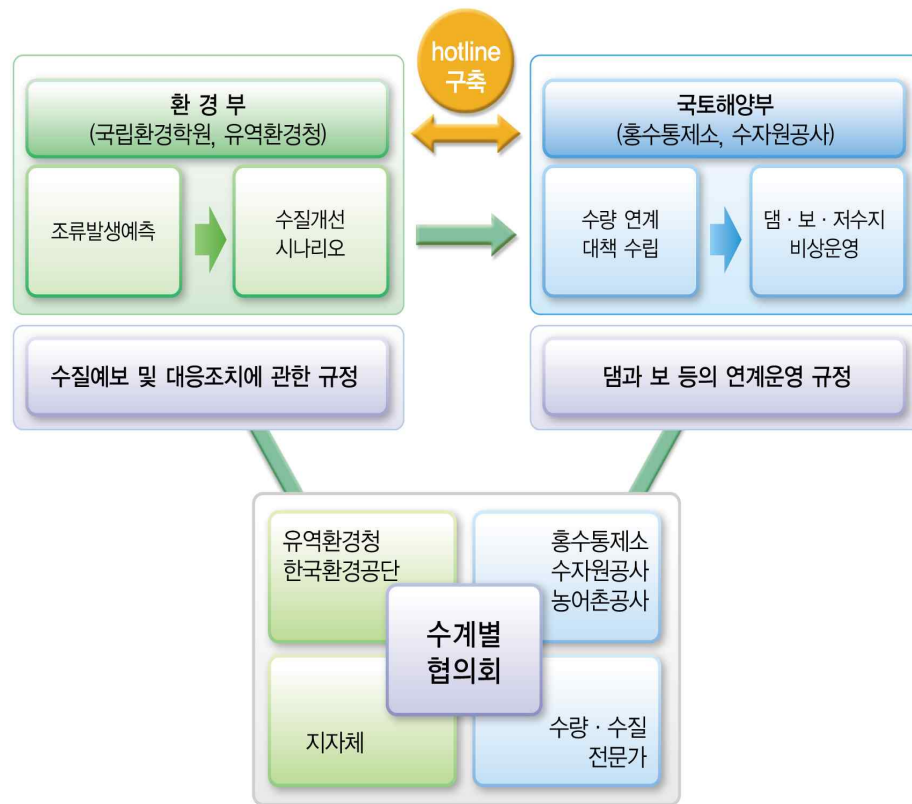
- 특히,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함
- 우선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, 특히 하천 인근의 수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임
- 조류발생시에 대비,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, 조류 예·경보제를 통해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, 유량을 확보하여 댐·보·저수지를 비상 방류하게 됨
- 이와 함께, 조류가 포함된 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,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,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
고도 정수처리시설 개요



			
착수정/응집/혼화/침전	모래여과	오존/AOP 및 활성탄	소독

수질예보 기반 수질·수량 연계관리



• 갈수기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

□ 업무보고에 이어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층 토론에서는, '모두를 위한 환경'이라는 주제를 놓고, △생활속 환경유해물질의 관리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, △新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축 정책이 논의됨

○ 토론은 주로 환경부에서 관련 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정책 제안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위주로 진행되었음

□ 첨부 : 1. 2012년 환경부 업무계획 요약
2. 2012년 환경부 업무계획(별도 배포)

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(요약)

가

정책 목표

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
사회 전 분야로 확산

나

주요 정책과제

1.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

- ①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
- ② 주민 불편·불안 생활환경 개선
- ③ 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환경 조성
- ④ 취약 계층·지역 물복지 증대

2.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

- 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
- ② 녹색성장 내실화 및 성과 확산
- ③ 자원순환 사회 구축

3.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

- ①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수요 충족
- ② 국토 환경가치 창출
- ③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

1.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

(1)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

□ 어린이 환경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강화

-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
 -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,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은 어린이 용품에 사용가능한 기준 마련

- 놀이터·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(1,000개소),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적용대상 확대

※ '16년까지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6,585개소에서 110,975개소로 확대

□ 실내환경속 유해물질 관리

- 영유아, 산모, 환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 강화
 - 건축자재에 포함된 오염물질 표시제 도입,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나무가공제품 인증제 도입

- 발암도가 높은 라돈(자연방사성물질)의 안전관리 제고

* 자연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 실내 라돈조사(1만가구), 취약계층 거주주택(반지하, 산간지역 등)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컨설팅(200가구)

- 세정제, 방향제, 탈취제, 물티슈 등 4종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사후관리

□ 아토피 등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

- 꽃가루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 지속 모니터링, 생활수칙, 진단·완화법 등을 담은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·홍보 책자 발간('12.10월)
- 저소득 가정등 대상으로 미세먼지·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요인을 진단·개선해주는 “친환경 건강도우미” 사업 확대(2,000가구)

(2)

주민 불편·불안 생활환경 개선

□ 석면위험 없는 대한민국

- 농어촌의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전개

* '12년 5,000동, 국고 30억원 지원(60만원 한도/동)

- 건축물, 석면함유 광물질관리, 자연발생석면 등 석면사용 전과정 안전관리*

* 공공기관, 학교, 다중이용시설 등 약 45,000동 석면조사,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 부여,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등

-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른 구제대상 질병범위 확대 및 구제급여액 현실화

□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 관리

-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(성능, 높이 등)로 주민피해 최소화

- 세탁기, 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저소음표시 기준 마련 및 휴대폰, MP3 등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소음성 난청 예방

- 도시별 소음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, 친환경적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,

□ 생활속 악취 저감

- 사업장(200개소 이상), 축산농가 등 발생원별로 저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, 완충녹지 조성 추진(5개 산단, 10.3ha)

- '악취저감기술 평가·인증제도' 도입 및 생활 악취 개선 T/F 운영('11.11~)을 통해 소규모 악취 발생원 저감대책 마련('12.12)

□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

- 주택단지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,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대상 확대

- 의료 폐기물 소형소각시설 개량(증설) 및 의료폐기물 배출·운반 관리 강화

(3)

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환경 조성

□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

- 인처리시설, 하수처리장, 생태하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('12년 하반기 304개)
- 수질예보제 본격 시행('12.1), 수질악화 예측시 오염원 차단, 댐·보·저수지 방류량 조절 등 수질·수량 연계 관리
- 오염지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「패키지형 지류개선」 추진(매년 10개)

□ 도심 건천·복개하천 생태복원 및 도랑·실개천 살리기

- 도심 건천·복개하천 복원사업 추가(10개소) 및 훼손된 하천의 생태복원('12년 151개)을 통해 도심속 생태공간 확보
- 주민·시민단체와 함께, 정화·복원이 시급한 도랑·실개천 복원(100개소)

□ 면(面)중심의 유역관리

- 환경친화적인 토지 이용시 손실보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'비점오염관리 계약제'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인증제 도입 추진('12.12)
-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저영향개발(LID) 기법 표준화, 하천 인근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로 난개발 방지

□ 참여형 수질 정화 및 환경친화적 물이용 문화 정착

- 지역주민, 지역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'우리강 살(리고) 가(꾸고) 지(키자) 운동' 추진(클린 코리아)
- 4대강본류 및 유입지류, 4대강 환경감시벨트 등을 대상으로 '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' 실시
- 청소년이 이끄는 물사랑환경 캠페인 전개

(4)

취약 계층·지역 물복지 증대

□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

-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충('11년 65.0% → '12년 67.0%)
- 갈수기 수질악화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지역에 강변여과수 시설 개발, 안전한 수돗물 공급
-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등 식수원 개발
-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160개소 추가 준공하여 하수도 보급 확대
 - * 농어촌 하수도보급률 '10년 53.5% → '12년 56.5%

□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

- 신규 정수장에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(28 개소), 조류 및 병원성 미생물로 부터 안전한 수돗물 생산
- 상수관망 진단·평가·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시설을 통합하는 지자체 대상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추진(추진지역 평균 유수율 75% 목표)
-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돗물 수질관리평가제 도입('12.12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주거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('12년 2,728가구)

□ 하수도 설치 및 운영 선진화

- 지자체별로 수립하던 하수도정비계획을 유역단위별로 수립, 시·군간 중복투자 방지(하수도법령 개정)
- 총인·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4대강 중점권역에 하수도시설 집중 투자('12년까지 2조8천억원, 기초시설 700개소, 관거 170개 지역, 총인 186개소)
-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저농도 하수·불명수 유입 예방 및 문제 확인시 원인 규명·시정

2.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

(1)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

□ 산업·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

- 12년도 감축목표(872만톤) 달성을 위한 점검·감독 활동 강화
-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추진
 - ※ '12년 목표(배출허용량 9,855천톤, 2.51% 감축) 이행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
-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 확대(공공기관, 일반 사업장+상업시설)
- '옅셋'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적 유연성 보완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 발굴·확산

□ 실천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

- 참여기업 및 포인트 제공 녹색 제품 확대('12.12월, 100개 기업, 350개 제품), 공공부문 인센티브 확대('12.12월, 250개소)를 통해 **그린카드 150만장** 보급
-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 확대('12년 500개소)

□ '규제와 지원'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

- (온실가스 배출규제) '12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대상 140g/km 단계적 적용
- (Bonus-Malus 제도 도입) CO₂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·부과금을 통해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, 자동차 소비 구조를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전환

□ 기후변화 적응대책

-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평가지도·전문가 컨설팅 등 지자체의 대응대책 수립 지원(15개 기초지자체)
- 기후변화에 대비한 **취약종 특별관리**(민감 생물 지표종 발굴,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 등), **취약습지 보호대책** 등 마련

(2)

녹색성장 내실화 및 성과 확산

□ **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**(수출 5조원)

- 수출 전략형의 원천·시스템·플랜트기술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‘글로벌탑사업단’ 운영(10년간 1조 5천억원, 물산업·자동차·자원회수 등 4개 사업단)
- 환경산업체 경영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, 생산설비투자 등 환경산업체 육성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(1,150억원)
- 개도국에 대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지원으로 협력사업 발굴(칠레, 페루, 방글라데시 등 3개국)

□ **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**(시장규모 30조원 달성)

- 녹색인증제 현장적용 지원 확대, 평가품질 향상,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
- Rio+20 부대행사로 ‘녹색소비·생산 정책 컨퍼런스’ 개최, 우리나라 녹색소비·생산정책의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

□ **녹색성장 지속추진 및 성과확산 기반 마련**

- 비영리민간단체(140여개)와 분야별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정책 홍보,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건의사항 수렴
-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(90개→200개), ‘푸름이’ 이동환경교실 확대·운영(5대→6대), 그린캠퍼스 선정 확대(10개→15개)

□ **국제 논의 주도적 참여 및 환경협력 강화**

- UNEP 녹색경제이니셔티브 협력, OECD 환경장관회의(‘12.3 파리), UNESCAP 서울이니셔티브 2단계 사업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
- 기후변화협약, 생물다양성 협약 등 논의에 적극 참여, 국제협상시 역할 제고
- 제14차 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(‘12.5 중국), 제11차 ASEAN+3 환경 장관회의(‘12.10 태국) 등을 통해 황사, 수자원 등 환경오염 해결 주도

(3)

자원순환 사회 구축

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

- BAU 대비 20%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('11년 63개→'12년 144개 지자체)
-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비중 확대('11년 3.6%(3개소 478톤/일) → '12년 8.1%(6개소 1,078톤/일))

□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강화

- (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) 現 품목별 방식에서 1인당 재활용목표량 부여('11년 2.6kg/인→'12년 3kg/인) 및 성분·용도별 재활용 극대화 기술 개발
- (폐자동차 회수·재활용 시범사업) 10만대(전체 발생량의 약 15%)에 대해 재활용률 95% 달성 및 폐냉매 적정 회수·처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

□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선

- 새로운 장기 재활용 목표율('17년)을 설정하여 생산자·재활용업체 계획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유도
- 자발적협약 대상 중 재활용 체계 구축 품목 및 금속자원 확보가 가능한 리튬2차전지 EPR 전환
- 대형마트 등 주문자상표 부착생산(OEM) 업체에 재활용의무 신규 부여

□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

- 非成形 고형연료제품 인정, 폐바이오매스(팜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) 수입사용 기준·절차 마련 등 폐자원 공급확대 제도 정비
- '13년까지 가연성·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 48개 확충
-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 지원(환경공단, 은행, 건설사 등 18개 기관 참여, '12년 1,000억원)

3.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

(1)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 수요 충족

□ 자연공원 및 생태공간 확충

- 무등산 및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
-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(400km)
- 제주 귤자왈의 훼손방지를 위한 ‘귤자왈 현명한 이용 및 관리대책’ 마련(‘12.10)

□ 도시 생태공간 확충

- 도시주변 유희·방치·훼손 공간을 활용한 생물서식지 중심의 도시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
- 폐도로, 폐교, 폐가옥 등 방치시설 복원을 통해 도시의 생태공간 확충 및 주민 접근·이용성 제고
-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등 제도 정비(‘12.10)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

□ 보호지역 지정 확대

- 생태우수지역 정밀조사를 통해 보호지역 6개소, 랍사르습지 1개소 추가
- ‘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’ 수립(‘12.6), ‘국립습지센터’(경남 창녕) 개원(‘12.5)

□ 생태관광 활성화

-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고 관광 매력도가 큰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(5개소)
- 생태체험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대해 ‘수학여행 바우처’ 지원
- (생태관광 인프라 확충) 산악형생태탐방연수원(지리산) 및 숙박형 생태 체험시설 에코촌 조성(순천만, 우포늪)

(2)

국토 환경가치 창출

□ 생태축 보전·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

- 백두대간 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호대책 추진
 - * 생태계 현황조사('12.3~12), 백두대간 생태학교 운영('12.9)
-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* 추진
 - * DMZ 일원 생태계조사 실시('12.3~12), 생태·평화공원 조성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('12.9)
- 4대강 주변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구역, 복원구역, 생태적 이용구역으로 차등 관리
- 4대강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을 확대, 수변구역의 역할 복원
 - * 단체 매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토지매수 '단체매도제' 시범 도입, 4대강에 일정 길이 이상의 '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

□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강화

-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편, 개발계획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검토 강화
- '환경영향평가사'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('12.12)
- 대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·용수절감, 친환경 자재, 생태 환경계획 등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추진
-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설계 및 친환경 운영 골프장에 대하여 '친환경 골프장 인정제' 도입('12.6)

□ 토양 환경 및 지하수 관리 강화

-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등 전국 토양·지하수 오염원 현황조사 및 토양환경지도 제작
-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대책 추진, 폐광산 108개소 및 산업단지 5개소 등 토양오염 및 오염우려지역 환경관리 강화

(3)

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

□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자원 관리 강화

-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 마련('12.10) 등 생물다양성 관리 기반 강화
-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강화('12.12)
 - ※ 관찰종 분포 조사 등 멸종위기종 조사 강화('12.2), 증식·복원사업 확대, 멸종 위기 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활용여건 개선(법령 개정 등)
- 해평습지와 우포늪을 대상으로 겨울철새(두루미류, 고니류 등) 서식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도래 개체수 확대 시범사업 추진('11.11~)

□ 나고야의정서 체제 본격준비 및 생물자원산업 경쟁력 강화

-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('12.6) 및 제2차 나고야 의정서 정부간위원회('12.4, 인도) 대비 전담대책반 구성·운영('11.11~'12.4)
- 기 발굴된 생물자원의 연구·분석 및 신규 발굴·확보 대상 선정 시 활용을 위한 '생물자원 유용성 평가기준' 마련 ('12.12)
-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업계 신규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민·관 합동 연구개발(R&D) 추진('12.3, 잠정)

□ 외래종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

-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생태계교란종 지정·관리 강화,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 제거 시범사업 추진('12.5~)
-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, 연구, 관리기반 마련(야생동물 질병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, '12.5)
-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·보상 대책 추진
 - *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(야생생물법 개정 추진),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 지원 및 피해보상 확대 등